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준비 2차 세미나

일시 : 2002년 5월 3일(금), 14:00~18:00

장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강당

주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토론회 순서 —

14:00 -
14:10

개 회 식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강문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WSSD 국가준비위 위원장)

14:10 -
16:50

1부: WSSD 논의동향, 쟁점 및 정책대응

◇ 좌장 : 박영숙 위원(WSSD 실무위원장)

■ 기초발제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14:15 ~ 14:30)
- 손성환 심의관(외교통상부)

□ 토론주제 1 :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14:30 ~ 15:20)
이찬근 교수(시립인천대)

윤창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토론주제 2 : Good Governance에 대한 입장(15:20 ~ 16:00)
이삼열 교수(유네스코아태교육원장)

김혜경 사무총장(지구촌나눔운동)

□ 토론주제 3 : 파트너쉽/이니셔티브(16:00 ~ 16:50)
조영숙 실장(여성단체연합)

조명래 교수(단국대)

이창호 중앙일보전문위원(시민사회연구소)

16:50 -
18:00

2부: WSSD 참가대책과 주요그룹의 역할

◇ 사회 : 김재옥 위원(WSSD 실무위원, Rio+10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 각 영역별 발표 : 진행상황, 역할, 과제 등
참가준비상황 및 현지동향 보고(홍준석 지속위 기획조정실장)
Rio+10 한국민간위원회(남부원 상임집행위원장)
Rio+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이상영 운영위원, 여성환경연대운영위원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김귀순 국제담당 자문위원)
산업계(엄기웅 대한상의 상무)

■ 전체토론 : 참가대책, 협력 및 현안과제

글 싣는 순서

1부 : WSSD 논의동향, 쟁점 및 정책대응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의 관점	
-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	
- Good Governance 에 대한 입장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을 위한 협력과 책임	
-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과 ‘정치적 선언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	
-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및 ‘정치적 선언문’에의 기여내용	
2부 : WSSD 참가대책과 주요그룹의 역할	
- WSSD 준비 진행상황 및 현지 동향	
- WSSD와 Rio+10 한국민간위원회의 대응	
- WSSD와 한국여성환경위원회의 역할	
- 지방정부의 WSSD 참가준비 현황 및 계획	
-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산업계의 역할 및 과제	

1부 : WSSD 논의동향, 쟁점, 정책대응

◇ 좌장 : 박영숙 위원(WSSD 실무위원장)

■ 기초발제

손성환 심의관(외교통상부)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 지정토론

토론주제1 -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

이찬근 교수(시립인천대)

윤창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주제2 - Good Governance에 대한 입장

이삼열 교수(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김혜경 사무총장(지구촌나눔운동)

토론주제3 -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조영숙 정책실장(여성단체연합)

조명래 교수(단국대)

이창호 중앙일보전문위원(시민사회연구소)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손성환 심의관 / 외교통상부

1. 시작하는 글

- 국제사회는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의 3축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을 버리고 환경과 빈곤, 보건 등 사회개발 측면도 동시에 고려한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 1987년 브룬트란트위원회 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세대간 형평성에 기초하여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 이후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국제노력이 있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21세기를 향한 행동계획인 의제21 (Agenda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 개념으로 제시하였던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Rio 회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리우 회의 이후 10년간 의제21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리우회의 이후 세계화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의제21의 이행을 가속화할 ‘정치적 선언문’과 ‘행동계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그룹간의 구체 사업을 담은 파트너십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3차례의 준비회의가 진행되어 ‘행동계획’을 논의하였으며, 5월말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정치적 선언문은 5월말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4차 준비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파트너십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파트너십 참가자들의 자발적 행동 계획을 취합하여 WSSD에 제출할 예정이다.
- 다음에서는 행동계획의 협상 배경으로서 리우회의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행동계획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나 선·개도국의 입장차이를 살펴보겠다

2. 리우회의 이후 평가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어떤 점에서는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세계 인구의 15%가 56%의 소비를 하고 오염배출과 에너지 과소비의 생산방식이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1일 1불로 생활하는 빈곤층의 비율은 1990년 29%에서 1998년에 23%로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12억이라는 절대적인 인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 HIV/AIDS 등 전염성 질병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24억이 비위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등 보건문제가 빈곤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매년 14.6백만 산림이 황폐화되고 목초지, 습지 등이 감소됨에 따라 생물종의 상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양의 산림이라고 일컬어지는 산호초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7%가 상실되었으며 30년 내에 30%가 추가로 상실될 전망이다.
- 의제 21의 계획과 이행간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의제 21에서 기대했던 “상당한 수준의 신규 및 추가재원”(substantial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이 지원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문제 외에도 비효율적인 지원노력,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천성을 결여하고 이념에 머물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3. WSSD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지난 10년간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WSSD 행동계획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 장려, 기후, 생태계, 해양 등 자연자원 보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계화 활용, 보건 증진, 군소도서국 및 아프리카 개발 지원, 재원·기술 등 이행수단 마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제(govern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행동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means) 즉 재원조달 방법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3월말에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준비회의시 개도국은 최대쟁점인 재원 등 이행수단 확보와 관련,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과 2002년 Monterrey Consensus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특히 신규의 재원확보 및 신탁기금 설립, 개도국 상품의 선진국시장에의 특혜적 접근 등 구체적 추진계획과 목표연도 설정을 강조하였다.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도하각료선언문과 Monterrey Consensus가 장기간 협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 회의의 협상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Monterrey 회의의 합의를 넘어서는 재원 조달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한편 선진국은 공적개발원조(ODA)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권, 법치, 시민 사회의 참여, 부패방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Good Governance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행동계획 협상문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빈곤퇴치

- 빈곤퇴치 부분은 선·개도국 공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으며, 대체로 유엔 새천년 선언문에 나온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 개도국은 빈곤퇴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개도국간 공동책임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빈곤퇴치를 위해 개도국의 주인의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성 평등, 고용 문제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촉진

- 소비·생산 패턴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소비는 선진국의 책임이 강하다는 개도국 입장과, 이는 선·개도국 공통적인 사항임을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되었다.
- 개도국은 현재의 대량 생산·소비 패턴이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서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선진국의 대량 생산·소비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또한 공공 인식제고 방안, labelling,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간에도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선·개도국간에는 향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을 유지함에 있어 상호 역할의 범위에 많은 이견이 표출되었다.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에 해로우며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의 철폐(elimination) 등 WTO 도하개발아젠다 관련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WTO 협상의 합의를 존중하여 도하개발아젠다의 내용과 문장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도국(77그룹/중국)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활용 등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EU 등은 수출신용 등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였다.

라. 이행 수단

- 개도국은 제9장의 서문에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선진국은 리우선언의 일 부분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이행수단의 장에만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민총생산(GNP) 0.7% 달성을 위한 목표연도(2010년)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은 구체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은 Monterrey Consensus가 장기간의 협상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이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EU는 시한 설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선진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시한(2019년)을 정하기 보다는 각국 사정에 비추어 자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개도국은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을 위한 개도국의 능력배양 등에 있어서 성과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환경친화적인 기술 이전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제 구비 등 개도국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 국내, 지역, 국제적 Governance 이슈

- Governance 이슈는 국내·지역·국제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우선 국제 Governance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다기화된 환경협약과 UN 체제, 국제금융지원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 체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중심기구로서 CSD의 권한 강화, 사업추진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다.
- 지역적 Governance와 관련하여서는 ESCAP 등 기존의 UN 지역사무소의 역할 증대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국내 Governance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법치(rule of law), 부패방지 등 Good governance의 구체적인 요소가 적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77그룹은 CSD의 강화 등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Governance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우리나라 입장 및 주요활동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행동계획’이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행동계획 전반에 걸쳐 구체 이행주체와 관련 gender perspective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서문내용중 평화·안전·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평화, 안전 등을 이루는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였다.
- 세계화와 관련하여 단기 유동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국제 자본이동을 위한 행동계획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으며, EU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환경친화기술의 개도국 이전과 관련하여 Rio회의이후 기술이전에 성과가 미미하였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정부지원에 의한 R&D로 인해 창출된 기술의 대개도국 이전 등 공공기술이전이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교육부문에 있어서 남녀 평등 실현이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5년까지 교육부문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 제거를 목표로 하는 EU 제안을 지지하였다. 한편, 호주, 스위스 등과 함께 폐기물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의 효율적 이행,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이행 촉진을 위한 제안을 공동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투자부문에 과감한 개방,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퇴치, 경제성장,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오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5. 파트너쉽 이니셔티브

-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기존의 경험을 통해 부족하게 느껴졌던 국제적인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WSSD에서는 정부, 국제기구와 여성, 청소년, 지방정부, 산업계, NGOs 등 주요그룹이 협력하여 의제21, 유엔새천년선언 등 최근 채택되었던 주요 원칙, 선언 등을 참고하여 2010년까지의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행동계획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심국가, 국제기구, 이해당사자가 앞서 언급한바 있는 Partnership Initiative에 합의하고 이를 WSSD에 제출 취합할 예정이다.
- 파트너쉽 Initiative은 국제적, 지역적 사업이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이행을 지원하고 WSSD 차원에서 제안되는 신규사업만이 해당이 된다. 동 사업을 제안할 경우 달성 목표, 추진 일정, 재원조달 계획,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 측면, 이행 모니터링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파트너쉽은 정부대표들 간의 협상과는 차별이 되는 정부, 국제기구, 주요그룹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6. 맺는 말

-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빈곤을 지속가능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퇴치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는 WSSD가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이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국은 지난 30-40년간 개발 경험을 통해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의 3축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국

가이다. 그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지 못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2000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WSSD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구두선이 아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며 21세기 일류국가의 기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WSSD에서 채택될 정상선언문과 행동계획은 의제 21과 함께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실천하여야 할 지침서라고 하겠다. WSSD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혜가 결집된 지속가능발전 지침서를 정부, 기업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한국사회 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세계화와 빈곤문제 : 재원조달의 관점

이찬근 교수 / 시립인천대 무역학과, 국제금융

1. 전지구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최상위국에 속하는 20% 인구나 최하위국에 속하는 20% 인구의 경제적 성과 비교
 - 소득: 1960년 30 대 1 → 1997년 74 대 1 → 2015년 150 대 1
1820년 3 대 1 → 1870년 7 대 1 → 1913년 11 대 1
 - 세계GDP: 86% 대 1%
 - 세계수출: 82% 대 1%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68% 대 1%

2. 발전 가능성의 봉쇄

- 냉전체제의 종식과 전략적 배려의 마감
 - ODA의 급격한 축소
 - 최대 공여국인 일본의 장기불황
 - G7 중 GDP의 0.7%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나라는 전무
 - 이를 준수하는 나라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 뿐
- WTO 체제
 - 남북간의 구조적 모순 부정
 - 1차상품 교역조건의 지속적 악화
(사하라이남의 최빈국의 경우, 70년대 이후의 교역조건 악화 누계치는 GDP의 120%)
 - 선진국 시장 보호정책의 지속(수출품목 다변화 저해, 특히 의류)
 - level playing field의 원칙
 - 무역관련(trade-related)라는 개념 하에 경제정책 주권 부정
 - 산업화/선진화 수단으로서의 무역정책 활용 불가
 - 노동 및 환경규범 도입 시 더욱 압박

- 속발 · 빈발하는 외환금융위기
 - 80년대 이후 150 회 발생
 - 세계적 불황의 시대
 - 금융시장에서의 '질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 현상 수시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는 자본자유화 강행 의지

3. 문제의 핵심: 시장의 신화

- 1990년대의 변화: 개도국향 자본이동의 증대와 민간비중의 확대
 - ODA의 비중의 급격한 축소
 - 90년대 초 전체 장기자본유입의 50%에서 98년 20%로 축소
 - FDI 및 capital market financing의 증대
 - 개도국향 FDI: 80년대 중반 전체의 18%에서 1998년에는 42%로 급증
→ 시장의 신화가 대두됨
- 그러면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민간 시장에 맡겨도 될 것인가.
 - 일부 개도국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아시아, 중남미의 emerging market group과 남아공, 인도, 아프리카의 일부 자원수출국
 - 또한 외환위기 발생시 순자본유입은 순자본유출로 전환
(개도국향 순자본유입: 1997년 1360억달러 → 1998년 720억 달러로 위축)

4.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최빈국의 현상

- ODA 의존도가 대단히 높으나, 이의 4분의 3을 교역조건 악화로 소진
-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로 내국 자본의 동원도 여의치 못함
- 총외채가 GDP의 80% 수준(unsustainable debt)
- 절대빈곤을 2015년까지 반감시킨다는 국제적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
- 이를 달성하려면 연 8%의 GDP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

5. 국제적 시각조정 의 필요성

- 지난 3월 21일, 22일의 Monterrey 합의의 한계
 - 철저한 서방식 시각
 - 모든 미사여구의 나열
 - 결국 문제해결의 전략은 부재

- 목표설정 상의 문제점
 - 개발의 목표는 무엇인가?
 - 빈곤 퇴치인가 아니면 선후진국간의 격차의 극복인가?
 - 현재 글로벌시장경제 체제의 수호를 위한 소극적 목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 소극적 목표로 인한 미온적 대안의 제시
 - 지나치게 자유화, 규제완화, 개방화에 중점

- 핵심적인 과제들
 - FDI 보다는 국내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빈곤퇴치는 전략이 아니다. '기업가 키우기'가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FDI 만으로는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 그렇다면 어떻게 풀뿌리 기업가를 키워낼 것인가?
 -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고, 국제적 지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외자동원보다는 내자동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어떻게 자본도피를 방지하고 국내저축을 극대화할 것인가?
 - 이것이 가능하려면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외자동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혁,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개혁은 유효할 수 없다.
 - 자유화 개방화 규제완화는 내적 역량의 축적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적인 재원지원의 새로운 방안은 없는가?
 - 내자동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실력있는 기업의 육성이 있을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 이러한 기초적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토빈세 혹은 최근 독일정부가 제안한 유사 토빈세의 도입을 강구해야 하며,
- 아울러 unsustainable debt에 대한 과감한 탕감 조치가 이루어야 해야 한다.

6. 한국의 입장 정리

- 한국은 개도국의 희망이다.
 - 구식민지국가로서 식민지를 갖지 않고, 산업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이다.
 -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
 - 경제발전의 take-off 단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역은 이를 위한 국익적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이로 인한 세계적 딜레마
 -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은 최선의 대안이다.
 -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무역적자국화, 개도국의 무역흑자국화라는 2중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중구조가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선진국의 경제를 개편해야 하고, 국제금융시스템 또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

윤창인 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세계화는 정말 문제인가?

-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규모로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무역이 얼마나 강력한 성장엔진인지를 다시 보여주었음.
 - 20세기말경 홍콩 및 싱가포르 주민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득은 3배 증대되었음.
 - 세계무역과 자본흐름의 증대 곧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임. 인위적 장벽의 제거, 저렴한 운송 및 통신수단에서 유래됨.
-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다른 방향에서 세계화를 해석함.
 - 세계화는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오염을 증대시키고 전세계에 걸친 다국적 기업의 횡포, 재생불능 자연자원의 남용, 강력한 시장의 힘에 희생되는 문화 및 가치 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반세계론자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와 관계없는 주장임.

(1) 빈곤의 악화 : 불평등 심화

-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가장 부유한 나라간의 평균소득에는 큰 격차가 존재

-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연간 개인소득은 500 달러 내외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연간 개인소득은 20,000달러를 상회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세계화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일부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무역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아시아 국가의 소득이 급속 성장하였음.

□ 다수의 개도국은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환율을 통제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시민의 항쟁 및 실정(失政)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 세계화, 즉 무역과 투자의 확장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실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체되고 낙후되었음.

- 1980년 이후 20대 세계 최빈국 중 15개국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 절반 이상이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전을 겪었으나 거시경제 안정을 이루고 분쟁을 피한 저소득국가는 1인당 2.9%에 해당하는 연간 성장률과 11.6%의 실질수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결론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에 최소한의 사회 및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제한된 역량과 취약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컸을 것임.

□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화와 관련된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 마련이 중요

- 효과적이고 투명한 제도, 책임 있는 정부,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법률적 틀이 견비된 적절한 지배구조

(2) 환경오염

□ 세계화가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주장

- 무역과 FDI가 이끄는 경제성장이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오염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마침내 감소하게 됨.
- 일부 오염은 인구증가 및 이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산물임.
- 경쟁의 격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관련 투자를 주저할 수 있으나 관련 입법 및 발전된 기술의 활용으로 대부분 OECD 국가는 물론 상당수의 비OECD국가에서 총체적 오염을 상당히 축소하였음.

□ 다국적기업이 환경규제가 약한 개도국으로 오염활동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소위, 기준 낮추기 경쟁(race to the bottom)의 가능성

- 20-3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있을 수 없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다국적 기업은 개도국 현지의 규정상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현지의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 등 해외투자의 상당 부분은 OECD 국가 내에서 이루어짐.

- 세계 FDI 흐름의 75% 정도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어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됨.

- 비OECD국가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FDI는 국유산업의 민영화에 관련되고, 민영화된 기업은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쓰레기와 오염을 감축하는 경향을 보임.
-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본국의 본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범에 따라야 하며 때로는 보다 엄격한 규범을 준수해야 함.

(3) 자연자원의 남용

재생가능, 재생불능자원은 인류의 역사에 걸쳐 채취되고 이용됨.

- 자연자원의 이용 및 고갈은 삶의 현실이며,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몇10년 전보다 여유 있게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임.
- 세계화로 사람들이 보다 잘 살게되는 정도에 따라 자연자원의 이용은 증대됨.

자연자원은 성장의 원천임. 성장과 환경훼손간의 관계단절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나 자연자원의 전면적 이용 중단은 상상할 수 없음.

-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상의 인구를 줄인다든지, 인간의 생활수준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임
- 방법이 있다면 자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발견, 발명하는 것이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음.

(4) 시장

시장은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인정 없는 것인가?

- 시장은 팔 물건을 갖고 살 것을 찾는 사람들의 집합체임.

- 시장은 이면에서 책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수천 수만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들의 결정밖에 있음.
- 시장은 일부 운영자 혹은 공직자의 통제하에 맡겨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 기호 및 가능성에 따라 반응함.
- 소비자들은 시장의 존재 덕분에 이제 50여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2. 빈곤문제 관련 재원조달

(1) UN 개발재원(몬테레이)회의

- UN 개발재원회의는 2000년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밝힌 2015년까지 최빈곤층의 50%를 줄이는 행동계획을 모색하고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2002년 3월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러나 구체적 행동계획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몬테레이 컨센서스라는 형태로 세계 50여 국가의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세계적선정체제(global good governance)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음.
- 향후 UN 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개도국을 포함하여 북구의 원조 모범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 GDP 대비 0.7%의 원조 이행 등에 대한 선진국의 약속을 촉구하였음.

- 미국은 향후 3년간 50억 달러의 원조 증여를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원조증액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는 GDP 대비 0.2% 미만으로 UN의 권고수준 0.7%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미국은 지배구조(governance)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음.

-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이번 몬테레이 선언을 계기로 원조공여 시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수혜국들이 스스로 동료검토과정(peer review process)을 강화하여 원조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원조가 낭비되거나 또는 일부 독재자들의 개인 금고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향후 순조로운 세계화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빈곤퇴치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후진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런 차원에서 몬테레이 회의는 단순히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증액방안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및 국제무역체제와 관련한 이슈들도 다루었음.

□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하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파산법원의 설립을 포함한 IMF의 새로운 국가채무정리방안이 새롭게 논의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2) 대안은 있을까?

□ 빈곤문제는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와 직결되나 하물며 특정 국가 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

- 일과성이 아닌 자생력을 키우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

□ WSSD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W/G 1에 제출된 G77, EU 및 미국 등 제안

-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인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금융자원의 조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강조(G77)
-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금융조달은, ①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자본 위에, ② 보완적으로 무역을 통한 이익과, ③ 민간 FDI와 같은 외부금융자원 3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EU)
- 빈곤을 타파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며 동 전략의 실천은 국제사회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함(미국)
- 국내 자원의 동원, 생산성 향상, 자본도피의 감축, 국제적 투자 및 지원의 효과적 사용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참여적이고 책임지는 지배구조의 확립(EU)
- 선진국 ODA의 UN 목표 0.7%의 2010년 이내 혹은 개별적 시간표에 따른 달성(한국, EU, 일본, 캐나다, 미국), 0.7%의 의미는?
- 비연계 지원으로 수혜국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특히 최빈개도국에 우선 지원
-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융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선진국은 세계 인센티브 제공(G77)

Good Governance에 대한 입장

김혜경 사무총장 / 지구촌나눔운동

개발인가? 환경인가?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가 확산되고, Agenda 21를 토대로 꾸준히 실천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발독재로 인해 파괴된 환경문제로 인해 ‘개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WSSD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거의 환경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선진국들이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반면, 후진국은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선개발 후분배/선개발 후민주화’의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서 환경보전을 부르짖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WSSD를 앞두고 개최된 1차 준비회의에서 개진된 주요국의 관심사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民官)부문,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 ▶빈곤퇴치 ▶자연자원의 관리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1992년의 리우선언에서도 ‘인류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원칙1)’과 ‘빈곤퇴치(원칙5)’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던 점을 되돌아 볼 때, 한국이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지구적 차원의 논의, 즉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다. UN은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1990년 당시 13억명)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8년 절대빈곤은 12억명으로 줄었지만, 주로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 때문이며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특히 물부족과 식수오염, 실내공기오염, HIV/AIDS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의 환경문제는 빈국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UN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과 특히 최빈국들을 위하여 GNP의 0.7%를 ODA(공적개발

원조)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도 이미 재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ODA는 0.22%이며,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4개국만이 0.7%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¹⁾

G8과 G77의 사이에 있는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후에도 환경, 노동문제나 ODA 공여 등에서 국제기준을 맞추는 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따라서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에는 스스로도 석연치 않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국제적인 시각 때문에라도 개도국의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한국이 차제에 대담하게 선진국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선진국의 입장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안에너지, 수자원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산업전략 등을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의 빈곤퇴치, 보건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요소이다. 리우선언의 원칙2에 의하면, 자국 내의 자원에 대한 사용권한이 국가에 있고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펴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는 개도국의 정책입안능력이나 거버넌스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책입안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책임성이 있고 투명하며 효과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피아난 UN사무총장도 “독립을 위한 투쟁처럼 개발을 위한 투쟁도 전적으로 개도국과 그 국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선행조건은 기본적 안보(basic security), 공정한 법 적용(rule of law),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honest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이며 이는 오직 그 나라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 OECD DAC회원 22개국의 평균ODA는 1995년에 GNP의 0.31%이던 것이 1999년에는 0.25%, 2000년에는 0.22%로 감소하고 있다. 이 중에서 0.7%를 넘는 국가는 덴마크(1.06%), 노르웨이(0.8%), 네덜란드(0.82%)이며 2000년에 룩셈부르크(0.7%)가 추가되었으며, 4개국 모두 100% 무상원조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GNP의 0.049%를 ODA로 공여하였으며 약 70%가 유상원조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ODA의 40% 이상을 민간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국가원조기구인 USAID의 경우 ‘공정한 법 적용’, ‘선거제도’, ‘시민사회의 강화’, ‘거버넌스’ 등을 주요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다. 거버넌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적 지방분권화, 입법부 강화, 정부의 정직성과 성실성, 정책의 집행, 군민(軍民)관계 등 다섯 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좋은 거버넌스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내정간섭적인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국제회의에서 합의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제도를 미처 갖추지 못한 신흥 민주국가들이나 독재국가들에게 무조건적인 원조가 무용(無用)하다는 회의론, 부패와 폐쇄적인 기업환경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들,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자는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WT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적용하려는 글로벌 콤팩트, 기술부족과 자본의 부족. 사면초과(四面楚歌)의 개도국들과 선진국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건장한 청년과 걸음마를 하려는 어린아이가 같은 트랙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좋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방법을 강구하되, 한편으로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ODA를 증액하고 개도국이 세계경제에 편승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년 전 서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발’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세계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입지전적 국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경제발전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며, 경제발전을 앞세운 탓에 환경이 파괴되고 민주화가 늦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번 WSSD를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정리가 보다 책임성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WSSD에 한국의 참여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와 시민 사회는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계의 어느 누구도 요하네스버그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국이 자신의 경험과 가진 것을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맞춰질 것이다.

<약 어>

WSSD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USAI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참고자료>

성찬용, WSSD(리우+10) 무엇을 논할 것인가?, Our Planet 2002년 1·2월, UNED, pp.40-41.

PCSD,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

'Democracy and Governance', www.usaid.gov/democracy/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une 3-14, 1992

Kofi Annan, "From Doha to Johannesburg by way of Monterrey: How to achieve, and sustai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Lectur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eb. 25, 2002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을 위한 협력과 책임

조영숙 실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실

1. “선언에서 행동으로”, 정치적 의지와 자원의 보장을 위한 책임

- 2002년 8월 개최되는 리우+10 회의의 1차 목적은 10년 전 개최된 리우회의의 결과문서에 대한 재확인 및 이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실행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우+10 회의 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진행되었고 오는 5월 발리에서 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이미 90년대 이후 유엔의 각종 회의는 세계화와 개방화, 자유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원인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무역·금융·원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 및 개편에 대한 논란, 유엔의 각종 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마련의 우선 순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리우+10 준비회의는 모든 당사자들간의 행동 중심의 접근, 특히 협정문서와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측정 가능한 행동계획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의 조달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WTO, IMF, WB 등 국제기구 및 각국의 최고결정단위의 정책의지가 지속가능 개발과 국가차원의 발전된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책임과 협력의 확산과 강화를 위해서 당사자(9 Major Group 포함)들의 협력과 행동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책임의 강화와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의 의미는 지난 1992년도의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여전히 환경위기와 국가간 및 국가 내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에 수사적 차원의 선언과 행동계획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각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주도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2. 공평성, 인권, 정의,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Rio+10회의는 공식적으로 협상문서인 Type 1 문서와 비협상문서인 Type 2 두 종류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다.
- 파트너십/이니셔티브는 이번 회의의 협상문서가 될 Type 1 Outcomes - Political Declaration(정치적 책임), Chairman's Paper(협상문서), 이행계획 (High-level planning resulting from Type1 agreements) - 의 결과를 지원하고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보완적 문서로서 각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협력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된다.
- 따라서 파트너십/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내용을 담게 된다.
 - 첫째, 리우회의를 통해 선언된 지속가능 개발의 원칙과 South-North Partnership을 재확인- 환경과 개발의 통합, 북과 남의 협력과 공평성 확보,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대화, 인권의 보장, 여성의 참여 등.
 - 둘째, 자원의 이용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접근 - 대부분의 시민사회는 빈곤층과 주변화된 집단의 정치적 힘의 행사를 강조하기 위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
 - 셋째, 민주주의, 대중참여, 제도적 능력의 향상 - 진행중인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역할 약화라는 최근의 경향으로 인해 local, regional, international 차원의 good governance, democracy, and stronger institutions의 중요성.
 - 넷째,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WTO, IMF, WB와 같은 국제기구가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다섯째, 당사자와 파트너십 - multi-stakeholder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에 대한 강조가 정부의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부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public-private sector 간의 파트너십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사기업의 책임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요구되며, 기업의 자유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이 방지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기업의 책임 - 리우회의는 기업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규정하였다. 비록 전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시장논리가 지배적이기 하나 부와 권력의 기업부문으로의 독점화 현상이 지속가능개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90년 이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책임과 규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 일곱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 과도한 소비는 다른 한편의 빈곤을 초래하며,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 있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또한 자원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원에 대한 권리와 자원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지속가능개발은 산업화 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성취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행동이 촉구된다.
 - 소비자 보호 특히 지속가능 소비에 관한 유엔의 권고 채택
 -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패턴에 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과도한 소비와 생산이 가난한 국가와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인식 고취
 -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부추 키는 반환경적, 반사회적인 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감축과 이에 대한 감시 및 보고
 -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
 - 에코 디자인, 에코 라벨링 등의 적극적 활용과 올바른 소비자 정보수단의 활성화

3. 파트너쉽/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기여방안

- 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수출주도 경제성장 국가를 대표하게 된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부정적 결과로서 민주주의 탄압, 인권침해, 환경파괴라는 한계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또한 지난 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와 자유화, 개방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대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정착 및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는 지속가능개발의 key word를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경험의 객관화는 한국적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고 있거나 주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특히 JUSCANZ 국가에 속한 한국은 우선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입장에 처해 있어 국가적 입장 선택에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쉬우나, 중간적 입장이 오히려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원칙과 일방적인 요구를 객관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위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첫째, 급속한 경제중심의 개발모델이 지닌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와 환경, 인권이 통합되지 않는 경제개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증언해야 한다.

둘째,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로서 IMF, WB, WTO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개편(alternative international architecture)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근거로 문제제기하고 또 대안적 구조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평화와 안보 및 사회안정에 관한 최근의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서 미국의 무기수입 압력 등으로 이슈화 된 군산복합체의 무기생산과 소비 강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장주도의 경제논리와 환경 및 사회발전, 그리고 인권 및 Gender-perspective를 통합하는 새로운 개발 및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내적 논의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고 추동하며,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과 ‘정치적 선언문’에 담겨야 내용에 대한 제안

조명래 교수 / 단국대학교

1. 파트너십/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성격

-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WSSD는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 ‘행동계획’, ‘파트너십/이니셔티브(partnership/initiatives, 이하 PI로 약칭)’에 관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중 PI는 지방의제 21, 유엔새천년선언의 목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혹은 채택)될 문건들을 국가, 국제기구, 이해당사자, 엔지오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추진하는 실천사업을 지칭한다. PI는 실행계획(달성목표, 추진일정, 재원조달, 능력형성, 이행모니터링 등)을 세워 WSSD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해당사자(혹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의한 실천인 만큼, 정부간 협상대상이 아니다.
- WSSD를 위한 제 3 차 준비회의에서는 PI의 내용, 형태, 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원칙이나 선언을 근거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을 ‘type 1’ partnerships (유형 1 파트너십)으로 부른 반면, 이를 이해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협력사업을 ‘type 2’ partnerships(유형 2 파트너십)라 불렀다. 다시 말해 ‘유형 2 파트너십’은 정부차원에서 범지구적으로 합의되거나 결의된 정치적 공약사항(political commitments)을 구체적으로 실행(action)하는 자발적인 파트너십 사업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유형 1 파트너십’을 정부간 협력이라면 ‘유형 2 파트너십’은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민관 협력이라 할 수 있다.

- ‘유형 2 파트너십’은 정부간 협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이며 자기조직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영역과 종류에 따라 정부, 지역조직,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민간파트너 등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접근이 ‘참여적’이어야하고, 아울러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두는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실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형 2 파트너십’은 ‘새롭고, 또한 가치를 창출하는(new/value added) 이니셔티브’로 기능해야 한다. 즉, 정상회담에서(혹은 정부간 합의에 의해) 채택될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식을 통해 그 뭔가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하며, 기 진행사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파트너를 끌어들이거나 사업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창출의 효과를 띠어야 한다.
- 파트너십 사업의 주안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들을 통합하여 연계하는 데 두어야 하며, 또한 국가적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형 2 파트너십’은 그 범위나 활동영역에서 국제적이어야 하며, 거기에는 전지구적, 지역적, 하위 지역적 활동범주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 추진을 주도하는 지역적 이니셔티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목표, 활동주체, 자원조달,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등을 담은 계획안이 사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금번 요하네스버거 정상회담에 제출할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는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 제 2 유형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구체적인 선정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한다. 정부대표들은 파트너십 사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농업
-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 청정 에너지
- 화학물질
- 교육 및 훈련
- 상수 및 위생
- 산림
- 정보통신기술
- 건강
- 지속가능한 도시화
-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 해양 및 수산업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 기술전이
- 등

2.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 기본방향

- 우리 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금번 요하네스버그 회담에도 한국대표의 참여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이를 증빙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방의제 21 작성을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속에서 광범위하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신설과 운영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차원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러한 관심과 비례하여 실천에 따른 결과나

효과가 어느 만큼인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적 관심과 노력을 모델화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확산시키게 되면, 이는 우리의 실천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동시에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소중한 기여를 하는 것이 된다.

- 금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은 국가간 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유형 1 파트너십’과 다른 유연하면서도 창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유형 2 파트너십’을 중요한 의제로 채택할 예정인 만큼, 한국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구적 운동에 뭔가 새롭고 차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하여 세계인들의 탄성을 낳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추스려 새로운 발전모델(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승화시켜감으로써 세계인들의 탄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나라가 제안할 PI사업은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선정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앞서 살펴 본 PI의 성격, 원리, 원칙, 특히 파트너십 원리(혹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의 실천방식)에 바탕으로 두어야하고, 두 번째는 한국적 경험과 ‘노우 하우’를 반영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PI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함께 충족시키는 ‘한국형 PI사업’은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배려하면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일종의 거버넌스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비환경분야(사회, 경제, 정치, 문화 분야)를 포괄하도록 하되, 특히 후자를 실천사업 내용에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상황성과 실천력이 차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 나라의 여러 주체들(정부, 엔지오,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추진주체의 구성은 사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담아내도록 해야 하되, 가능하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한국 엔지오(혹은 시민사회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즉, ‘엔지오 주도-정부보조 파트너십’ 사업) 방식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예시

위와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서 우리 나라가 차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PI사업으로는 다음을 예거할 수 있다.

-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 환경문제의 핵심이 되는 황사의 발생과 초국경적인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정보교류, 공동캠페인(예, 식수), 정책프로그램개발, 기금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십 사업
 - 한국의 주요 엔지오가 주도, 정부가 보조하는 파트너십
 - 기왕의 정부간 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결합하여 실천사업 중심으로 추진
- 동북아 빈곤퇴치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중국과 북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고용창출, 복지사업 등을 민간기구의 주도하에서 추진하는 파트너십 사업

- 일본, 한국, 대만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신빈곤(예, 실업자, 홈리스,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교류, 캠페인, 공동사업 등을 민간기구 주도하에 추진하는 파트너십 사업
 -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고 정부나 기업이 보조하는 파트너십
- 동북아 환경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의 개방화와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경을 가로지르면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및 갈등이 앞으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정부차원과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며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 사업
 - 이는 이미 유네스코나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지만 이를 좀 더 공식적인 파트너십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식으로 추진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의 도시화률은 아직 40%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향후 20년 이내에 60-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도시환경의 급격한 악화, 그리고 도시간 교류에 따른 환경문제의 초국경적 확산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동북아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본 사업은 도시화가 앞선 한국과 일본의 엔지오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개발모델 개발, 주민주도 실천사업, 주민참여방안, 관련정보 및 인력의 교류, 공동캠페인 등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북아 지속가능한 도시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은 지방의제 21를 통해 강구될 수 있는 바, 한국의 성공적인 지방의제 21 작성 경험은 동북아 인접 국가들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음. 본 사업은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경험을 국가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북아의 주요도시로 확산시키고자 함

-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중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모델을 보다 일반적이면서 선도적인 모델로 다듬어 이를 동북아 주요 대도시와 협정을 맺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점차 다른 중소 도시로 확산시켜 가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국가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 거버넌스 원리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의 운영경험이 중요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

* 거버넌스 원리를 활용한 파트너십 기구로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의 특성*

- 거버넌스 모델: 시민, 기업, 정부 3자간(시민사회, 시장, 국가간) 협치
- 거버넌스 모델로서 서울시 녹색위의 특징: 다양한 파트너십 기구(지속가능정책위원회, 의제실천협의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가 제도화된 모델
- 녹색위의 파트너십 형성과정: 갈등->조율->협치->합치의 연속과정
- 녹색위 파트너십의 내용: 참여주체들이 소유한 자원, 권력, 책임의 공유화
- 녹색위 파트너십의 지향: 다자간 협력을 통한 서울(혹은 시정)의 지속가능성 도모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지만, 이 성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양식의 강구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서 핵심은 '생산-소비'가 지속가능하게 순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느 만큼 현실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음
- 제안된 사업은 현재 정부(특히 환경부)가 주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 사회모델 건설에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되, 이를 동북아의 다른 국가로 확장시켜가는 활동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

○ 동북아 물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조만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전망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수가 실천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방식이 강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과 보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은 동북아 국가에서 이러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 및 인력의 교류, 캠페인, 공동사업, 수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 재정의 상호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의 핵심은 친환경적인 농업. 농업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방식으로부터 구매하는 전 부문에 환경성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본 사업은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하고 구매·소비하는 동북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여러 엔지오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해서 일본, 대만, 중국의 유사단체들과 연대해 일차적으로는 인접국간에 교역이 되는 농산물의 친환경성을 촉구하고 또 이를 제도화하도록 하면서, 점차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원을 국가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동북아 네트워크

- 동북아 국가 사이에는 경제발전의 격차가 현격해 앞선 나라의 기술이전이 후발국가에게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사업은 동북아 내에서 (혹은 전세계적으로) 이전되는 기술이 수입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참여연대 과학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제안된 사업은 국내 엔지오를 중심으로 정부정책과 연동하면서 동북아의 관련 엔지오 네트워크와 협력을 맺어 동북아 내에서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사업의 선정

- 위의 사업 중(혹은 그 밖의 것들 중)에서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채택해 이를 국가사업으로 요하네스버그 회담시에 제출하도록 함
- 본 발제자는 여러 사업 중에서 특히 ‘동북아 지속가능한 도시거버넌스’을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을 한국의 전략적 PI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함
 - 제안된 사업은 거버넌스 원리에 입각해 구성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모델을 동북아의 다른 대도시(예, 북경, 상하이 동경, 평양 등)과 협정을 맺어 설치·운영토록 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고, 의제실천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업 결과를 상호평가하고 모니터해, 앞으로 가속화될 동북아 도시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준비팀 구성

- PI사업은 WSSD와 관련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별적이면서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치밀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요구됨
- 요하네스버그에 한국형 PI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팀을 구성해, PI사업의 조건 및 기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국제적인 무대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으면서 실천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야함. 선정된 사업이 WSSD사업으로 제출되기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안, 재정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함

3. 정치적 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에 관한 제안

- 지속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부문과 지역적 이니셔티브의 강조
- 범지구적인 생산 및 소비방식의 촉구
- 지속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참여 촉구
-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술 및 경제활동(예, 유전자 조작기술)이 초래할 반생명적·반도덕적 결과와 생태계 순환의 단절(비지속성)에 대한 경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및 '정치적 선언문'에의 기여내용

이창호 부소장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1. 92년 Rio 회의의 이행여부 및 원인분석

□ Agenda 21의 이행여부

<선진국의 태도>

- 1) “상당한 수준의 신규 및 추가재원”의 무산
 - 거의 모든 선진국 (4개국 제외)이 유엔이 권고한 공적개발원조 (ODA) 약속 (GDP의 0.7%) 이행하지 못함.
 - 미국의 ODA도 GDP 대비 0.2% 수준; 아직도 0.7%의 달성을 위한 목표연도도 2010년 규정에 대해 반대함 (2002년 3월 몬테레이 컨센서스)
 - 최빈 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
- 2) 비효율적인 지원노력: 부패정권에서 사장되는 등
- 3)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천성 결여
 - 이념에만 머물름.; WTO체제의 결함 개선 필요
- 4)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의 철폐 등

<개도국의 태도>

- 1) 개도국의 주인의식 결여 (empowering의 필요)
- 2) 부정부패; 일관성, 투명성을 잃은 정책 추진
- 3) 성, 고용 등에서의 차별 등

2. 지난 10년 간의 국제사회 변화 및 향후의 변화

□ WTO 체제의 강화

- 일부 개도국의 도약 및 가입 (예, 중국)
- 자본이동의 활발; 무역장벽의 실질적 철폐
- 노동시장의 globalization

□ Global Governance의 확대

- 개도국의 정치적 블록화 강화
- 국제 NGOs 들의 활동 확대
- 인터넷을 통한 global 시민사회의 확대

□ 새로운 국제 테러리즘 등장

- 9.11 테러 사태이후의 미국 패권주의 확대
- 지역 분규, 국지전의 다변화; partialization
- 새로운 국제 전쟁으로 인한 빈곤의 확대 재생산

□ 인종, 종교적 파편화 확대

- 유고의 인종청소, 터어키의 쿠르드족 등
- 종교적 갈등 확대: 이스라엘/아랍권 재대결
- 역시 개도국의 발전 지연

3. 새로운 대안/주장

□ '정치적 선언' (Rio 회의에 대한 반성)

1) 지나치게 경제/사회/환경문제로만 문제에 접근

- 즉, 국제 정치적, 종교 문화적 시야 결여
- 보다 macro한 시야 필요

2) 따라서 선진국-개도국간의 '대결'로만 문제 파악

- 개도국의 빈곤문제, 환경문제가 선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있

는 논의 있었어야

(예, 9.11 테러의 원인- 아랍국의 빈곤/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 종교적 원인 등등 복합)

- 3) 인터넷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세기에 개도국의 참여 끌어내는 방안 있었어야
 - 개도국 국민들에게 통신 지원; 인터넷 교육 등과 같은 선진국의 과감한 지원 필요 (개도국 국민의 잠재 노동력, 구매력 확대-> 선진국의 시장 확대라는 인식 필요)
 - (예, 북한 김정일의 IT 관심)
 - 그런 점에서 “Rio 회의는 20세기 패러다임”
- 4) 개도국 탈출 사례에 대한 국제적 교육 있었어야
 - (예, 한국, 대만 등)
 - 때론 불균형 성장시절도 필요; 선진국/개도국 모두 이해할 필요 있음;
 - 획일적 접근 경계
- 5) 개도국의 민주화 지원
 - 개도국 빈곤의 원인; 대부분이 권력집중, 부정부패 및 그에 따른 비효율
 - ‘직설적이지 않은’ 우회적 지원 언급 필요
 - (예, 개도국의 NGOs 지원, 인터넷 교육지원 등)

□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새로운 사업 대안)

- 1) 기존 제안지지
 - 신규의 재원확보 및 신탁기금 설립
 - 개도국 상품 및 개도국 진출기업에 특혜 등
 - 동료검토과정 (peer review processes) 강화 등
- 2) 신규제안 (선진+개도국의 정부, 기업, NGOs 등)
 - 국제 IT 교육 및 연구 공동사업
 - 개도국 NGOs 종사자 및 공무원 선진국 연수기금
 - 금융, 자본자유화의 폐해 공동연구(선진+개도국)

2부 : WSSD 참가대책과 주요그룹의 역할

◇ 사회 : 김재옥 위원(WSSD 실무위원, Rio+10
민간위원회 공동대표)

■ 각 영역별 발표

참가준비상황 및 현지동향 보고(홍준석 지속위 기획조정실장)

Rio+10 한국민간위원회(남부원 상임집행위원장)

Rio+10 한국여성위원회(이상영 운영위원, 여성환경연대운영위원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김귀순 국제담당 자문위원)

산업계(엄기웅 대한상의 상무)

WSSD 준비 진행상황 및 현지 동향

홍준석 기획조정실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I. 국가준비위원회 차원의 준비 진행사항

1. 준비실무위원회 및 3개 대책반 구성 운영

-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제지역협력분과위원회 박영숙 위원장) 외 각 분과위원, 관계부처 국장, 관계전문가, 주요그룹 대표 등
- 3개 대책반 가동
 - 총괄대책반(지속위 기획조정실장) : 실무위 운영 지원 및 총괄 대책
 - 전략대책반(환경부 국제협력관) : 국내대책 수립 및 협상문안 입장 마련
 - 협상대책반(외교부 환경과학심의관) : 국제동향 파악, 정상회담 대응 및 협상문안에 대한 협상전략 마련
- 그동안 11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주요 논의동향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및 UN권고사항 이행 등을 심의

2. WSSD 준비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 WSSD에 앞서 4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준비회의 및 지역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 Prepcom I (2001.4.30-5.2, 뉴욕)
 - 주요 논의사항 : 향후 의사일정 및 주요논의주제 결정과정 검토
 -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2001.11.27-11.29, 캄보디아 프놈펜)
 - 주요 논의사항 : 아시아 지역회의 및 아시아지역보고서, 지역강령 채택
 - ※ 소지역회의(2001.7.26-7.28, 북경 : 동북아 소지역회의)
 - Prepcom II (2002.1.25-2.5, 뉴욕)
 - 주요 논의사항 : 5개 지역준비회의 및 주제별원탁회의 보고,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이해당사자 회의, 의장 보고서 초안 채택

- PrepcomⅢ(3.25-4.5, 뉴욕)
 - 주요 논의사항 : 의장보고서 초안 검토 및 협상
- PrepcomⅥ(5.27-6.7, 인도네시아)
 - 주요 논의사항 : 각료급회의, WSSD에 제출할 최종문서 채택

3. UNCSD 권유사항 이행

-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 및 '국가개요서' 작성, UN 제출
- 환경부(전략대책반)를 통해 101가지 지속가능발전사례 수집 제출 예정

4. 주요그룹의 참여 촉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 WSSD 준비과정에 주요그룹 및 일반의 참여와 토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확산 계기로 활용
 - 공개토론회, 준비회의 동향 공유
 - 협상문안에 대한 주요그룹 의견 수렴
 - WSSD 홈페이지 개설, 안내책자 배포
- Rio+10한국민간위원회, 한국기업지속가능발전협의회(KBCSD), Rio+10한국여성위원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협력 강화 및 참가지원활동

II. 향후계획

1. WSSD 대응에 관한 자문보고서 작성

- WSSD 실무위원회 전략기획팀(TFT)이 작업중인 「WSSD 대응전략」을 토대로 WSSD 국가대응에 관한 자문안을 작성
 - WSSD 참가에 앞서, 4차례의 준비회의 결과와 관계부처 및 NGO 등 주요그룹의 검토의견을 수렴
- 일차로 5월중 본회의 상정하여 대통령께 자문

2. 제4차 각료급 준비회의(Prepcom) 대표단 파견

- 4차 준비회의 : 5. 27 - 6. 7, 발리
 - 재원, 기술이전, Governance 등 이행수단에 대한 추가 협상
 - WSSD에 제출할 최종 문서 채택 : “정치적선언문”, “이행계획” 및 “파트너쉽/이니셔티브”

3. WSSD 현지 홍보준비

- 현지에서 배포할 홍보자료(영문판) 준비
 -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지속위 활동을 중심으로)
: 작성완료
 - 지속가능발전 성공사례에 관한 홍보자료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추진
- 홍보부스 설치(Ubuntu Village) 추진

4. 현지행사 실무준비

- 대책반별 활동 점검 및 역할분담
- 공식행사(개, 폐회식 포함), 관련 회의 및 Side Event 연계 9 major 그룹 활동 지원 및 협력 증진 - 여행사관련 사항 포함 정보 공유
- 숙소, 홍보부스, 민간단체 활동(각종 포럼, ‘한국의 날’ 등 이벤트), 안전 등 정보공유 및 체계적 활동을 위한 상호 지원
- 기타

Ⅲ. 현지 행사 참가 안내 및 동향

1. WSSD 주요 행사 개요

기간	회의명	장소	기타
준비회의(Summit Preparatory Committee)			
01.4.30~5.2	1차 준비회의(Prepcom 1)	뉴욕	-향후 의사일정 및 주요 논의주제 결정과정 검토
1.28~2.8	2차 준비회의(Prepcom 2)	뉴욕	-국가별, 지역별 준비회의 WSSD 협상문안초안 준비
3.25~4.5	3차 준비회의(Prepcom 3)	뉴욕, 뉴욕UN본부	-의장보고서 초안 바탕으로 이행계획 문안 협상
5.27~6.7	4차 준비회의(Prepcom 4) - 각료급 준비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의 의사일정 및 공식 채택문서 준비
본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8.24~25	남아공 개회식(식전행사)	원더러스 스타디움	남아공 주최 식전행사
8.26	UN 개회식	샌튼 컨벤션센터	UN 공식 개회식
8.26~30	위원회 회의	샌튼 컨벤션센터, Ubuntu Village	각 위원회
8.31	인류의 요람 이벤트	"	
9.1~9.3	정상 회의	샌튼 컨벤션센터	
9.3	UN 폐회식	샌튼 컨벤션센터	
9.4	남아공 폐회식	원더러스 스타디움	식후 행사
부대 행사			
일시 미정	지방정부포럼(Local government Forum)	크라운 프라자	
8.26~9.3	지속가능 기업 포럼 (Business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힐튼호텔 컨벤션 내	
	민간단체 회의	엑스포 센타	
기타 회의 (기간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계 회의 ■ 청소년 회의 ■ 남성, 여성 회의 ■ 도시녹색화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 회의 ■ 지속가능한관광 회의 ■ 의료계 회의 ■ 환경변호사모임 	이 회의들은 Rio 회의때 발표했던 Agenda 21에서 명명한 Major Grou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전시회	우수이행사례 전시	Santon Taxi Rank	
	남아공 정부 엑스포	국제 공항	
	다양한 이해관계 전시회		

2. 일반현황

□ 회의장 배치 및 WSSD 참가인원

- 정부간 회의가 열리는 Sandton C.C를 중심으로 Zone 1을 설정
 - Zone 1내에 각국 정상급 등 대표단에 숙소로 이용될 24개 호텔이 위치
 - Zone 1외곽으로(Zone 2-10) NGO 등 회의장(NASREC), 기타 숙소 등이 분포
- 남아공정부에서는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2만, NGO4만, 기자단 5천명 등 총 65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 숙소위치

- 정부 대표단 숙소 : 회의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5km이며, 정상적인 교통상황하에서는 약 5분 소요. NGO회의장인 NASREC에서는 차량편으로 약 20분 소요
- NGO 숙소 :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 NASREC에서 차량편으로 약 20분 소요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및 기타 인사 : Zone 1-10 및 개별 예약

3. 주요 행사장

가. 샌튼 컨벤션 센터(Sandton Convention Centre)

- 개·폐회식을 비롯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

나. 엑스포 센터(Expo Centre)

- 9개 주요 그룹(major groups)의 NGO 지구포럼이 열릴 예정임.

다. 원더러스 스타디움(Wanderers Stadium)

- Ubuntu Village의 현장으로, 샌튼 컨벤션 센터, 엑스포 센터 및 숙박시설을 연결해 주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며, 물류 중심지(logistics hub)로서

웰컴카드 판매, 미디어 센터, 의료 및 보안, 음식, 관광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곳에서 웰컴 카드를 R600(US\$60)에 구입하면 교통편 이용 및 특별행사 입장, Ubuntu Village 및 전시회 입장, 콜센터 이용 및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 숙 박

- NGO 회의대표 등 여타 참석자들은 2002 WSSD 공식 행사대행사인 JOWSCO 및 이의 숙박 및 여행 대리업체인 Global Conferences DMC (<http://www.wssddmc.com>)에서 숙박시설 예약을 할수 있음. 우선 문의 (Priority Enquiry)에 등록하면 숙박 예약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음. 회의 참가 대표단은 11개 구역(zone)에 분산 수용될 예정임.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예약하여야 함

5. 공항 안내

- 금번 회의를 위해 아래 5개 공항이 운영될 예정임.
 -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 케이프타운 국제공항
 - 더반 국제공항
 - 란세리아
 - 워터클루프 공군기지
-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콕,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 경유 항공편이 있음. 남아공 당국에서는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5월 31일 이전까지 출발지를 DMC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6. 사 증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이번 정상회의 참가 목적으로 남아공 방문을 희망할 경우 30일간 사증(visa) 없이 체류가 가능함.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주소 및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37
주한 남아공 대사관
우편번호 140-210

Tel : (02)792-4855, Fax : (02)792-4856

Email : sae@saembassy.dacom.net

URL : <http://saembassy.dacom.net/korean/korean.htm>

7. 교 통

- Global Conferences DMC를 통해 예약한 단체는 공항에서 행사지 사이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위치한 만남의 키오스크(Meet-and-greet kiosks)에서 요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 등으로 이동하게 됨.

8. 기 타

가. 건강(예방 접종 등)

- 아래의 지역을 통과하여 남아공에 입국할 예정인 경우,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접종 당일 1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Angola	Congo	Guinea	Senegal
Benin	Cote d'Ivoire	Guinea-Bissau	Sierra Leone
Bolivia	Democratic Rep. of Congo	Guyana	Somalia
Brazil	Ecuador	Kenya	Sudan
Burkina Faso	Equatorial Guinea	Liberia	Suriname
Burundi	Ethiopia	Mali	Tanzania
Cameroon	French Guinea	Panama	Togo
Central Africa Rep.	Gabon	Peru	Uganda
Chad	Gambia	Rwanda	Venezuela
Colombia	Ghana	Sao Tome & Principe	

- 행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광지역은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이 없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주의를 요하므로 출발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함. 또한 행사준비 당국은 여행자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나. 환전

- 미국의 한 경영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요하네스버그의 물가는 서울의 4분의 1 수준 정도이며, 남아공 화폐 란드(R)는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이나 각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음.

다. 의복 및 날씨

- 행사 기간 동안은 남아공의 겨울에 해당하며, 온도는 한국의 봄날씨 정도임.

라. 관광

- 현지 관광예약을 희망하는 경우 <http://www.wssdtravel.com/home.htm>에서 등록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마. 통신

- 동전 또는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기를 현지(공항 또는 쇼핑센터)에서 임대할 수 있음. 개인 이동전화기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업체에 문의하기 바람. 인터넷은 행사지 또는 일부 시내 호텔, 사업지구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

바. 주요 웹사이트 안내

- PCSD : www.pcsd.go.kr (<http://wssd.pcsd.go.kr>)
- 환경부 : <http://wssd.kei.re.kr>

- <http://www.johannesburgsummit.org>
(2002년 WSSD를 위한 UN의 공식 웹사이트로서 대륙별 지역회의를 포함해 회의일정과 안건,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볼 수 있다)
- <http://www.earthsummit2002.org>
(UNED forum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주요그룹(major group)에 관한 내용을 비롯 mult-stakeholder networking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un.org/esa/earthsummit/>
- <http://www.iisd.ca/wssd/portal.html>
- <http://www.iclei.org/rioplusten/>
- <http://www.joburgsummit.co.za/>
- <http://www.rrcap.unep.org/wssd/>

WSSD와 Rio+10 한국민간위원회의 대응

남부원 상임집행위원장 / Rio+10 한국민간위원회

□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 : WSSD를 앞두고 43개 민간환경단체/시민, 민중단체가 구성한 한시적인 연대기구

- 참여단체: 43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산YMCA/녹색교통운동/녹색미래/녹색사회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대구환경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연합/
민주노총/문화개혁시민연대/부산YMCA/서울YMCA/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생명회의생명사랑/생태보전시민모임/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수원YWCA/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협의회/여성민우회/여성환경연대/연안보전네트워크/에너지시민연대/
우이정보존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청년환경센터/한국도시연구소/
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환경과공해
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정의시민연대/그린페밀
리운동연합

- 의제21의 9개 주요그룹 중 기업 (Private Sector)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주 요 그룹을 포괄 (지방정부, NGO,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민, 원주민(?), 소비자)

□ 활동목표 (Goal)

- (1)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
- (2)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
- (3)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의 한국 NGO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를 점검

- (4) 주제별, 주요그룹별 소위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확대
- (5) 리우+10을 계기로 부각되는 국제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 조직

□ 역 할

- (1) 민간보고서 작성
 - 주요 그룹별, 주제별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지속가능성의 증진정도를 평가하고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 전개
- (2) 리우+10 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공동입장을 마련
- (3) 주요그룹을 발굴하고 주제별, 주요그룹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 (4) 리우+10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활동
- (5) 리우+10을 준비하는 국제회의(지역회의, 준비회의)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세계 NGO와 연대활동 강화
- (6) NGO 행사장에서의 행사 개최 및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주요 사업

- (1)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 일시 : 2002. 3. 6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2) 한국민간보고서 작성: 「리우이후 10년간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
 - 주제별, 주요그룹별 소위활동을 통해 의제21을 평가하고 과제를 정리
 - 개별 소위의 담당단체가 이를 집약하고, 5월 21일 이를 종합하는 심포지엄을 거쳐 최종보고서 작성
 - 국,영문 보고서 제작

(3) 국내 행사

- 워크숍 : 각 이슈 및 주체별
- 심포지엄: 5월 21일(화) 10:00-17:00, 여성개발원
- 홈페이지 구축 (www.rio10.or.kr)
- 시민 홍보 및 교육사업
- 기타행사 : 시민참여행사 등

(4) WSSD 참가 및 현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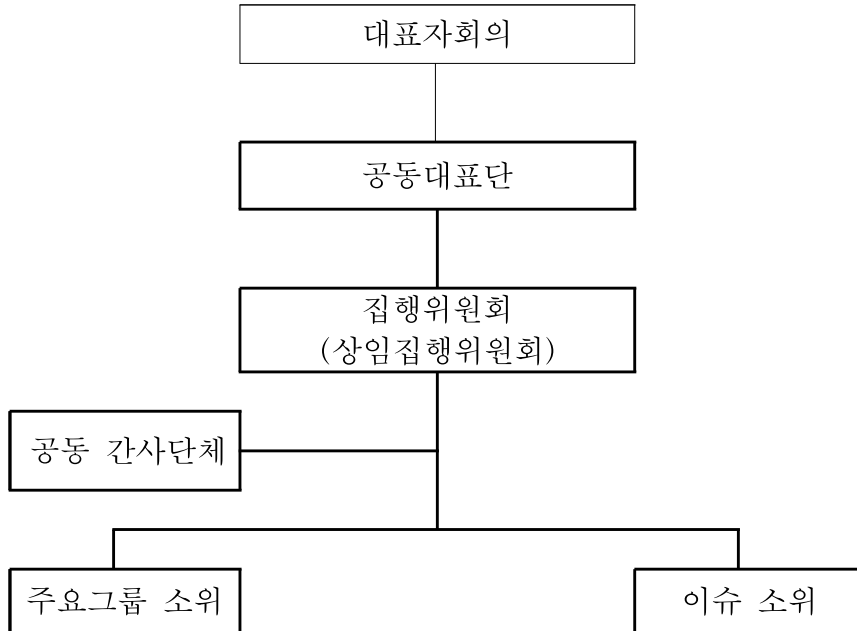
- WSSD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참가단 조직 및 준비오리엔테이션
- 각국 NGO 및 국제NGO 등과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PrepCom에 대표 파견)
- 현지 행사 준비 : 국제회의, 이슈별 포럼운영, 문화행사, 부스운영, 홍보물 (영문브로셔, 책자)
- * 한국의 날(Korean Day) : 8월 28일(수) 오후, 현지 NGO 행사장

(5) 후속활동

- 보고대회
 - Rio+10의 결과물을 한국시민사회와 공유,
 -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구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참여,
 - 한국시민운동이 글로벌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수용토록 촉매역할
- 참가보고서 작성

□ 조직체계

1) 조직표



- (1) 공동대표 :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9명
- (2) 집행위원회: 24인 (주요참여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
- (3) 상임집행위원회: 9명 (공동대표 단체 실무책임자 급)
- (4) 이슈 및 주체별 네트워크 간사단체 (아래 도표 참조)
- (5) 공동간사단체

환경연합	김춘이 팀장	kimchy@kfem.or.kr
전국YMCA연맹	김의욱 부장	woody@ymcakorea.org
소시모	이은영 부장	sweetie69@dreamwiz.com
녹색연합	이유진 간사	leeyj@greenkorea.org
여성환경연대	이미영 국장	ecolmy@hanmail.net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실장	ohskk@ecojustice.or.kr

- (6) 사무국 이지영 keyma@hanmail.net

	단 체 명	전화/팩스
토지이용 및 사막화	환경정의시민연대	743-4747
소비패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모임	739-5441 /736-5514
빈곤	도시연구소	738-4292
에너지, 교통	에너지시민연대	733-2022
	녹색교통	708-4855
금융과 무역		
생물다양성	환경운동연합	735-7000 /730-1240
건강과 보건	녹색소비자연대	747-4998
정보	함께하는시민행동	921-4909
유해화학물질 및 고형폐기물	쓰시협	744-5305
방사능폐기물	청년환경센터	718-0371
대양과 바다 (미확정)	연안보전네트워크	031-484-3301
대기보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745-4044
산림	생명의 숲 가꾸기	735-3232
관광	녹색사회연구소	747-8500 /766-4180
인간정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57-7387
산악	우이정보존회	762-5211
생명공학	환경운동연합	723-4255
물	녹색미래	3672-4900 /3672-490
청소년	한국YMCA전국연맹	754-7894
여성	리우+10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	722-7944
지방정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031-249-4269
소외계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농민	전국농민총연맹	
소비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노동	민주노총	2636-0166

< 별 첨 >

□ 참고자료 : 리우 이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공동의 과제 (발족식 입장문서 중에서 발췌)

올해 2002년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원칙을 담은 "리우선언"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의제 21"을 채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청소년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생태계 보호, 건강한 시민사회의 확장,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 보호, 그리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계실현의 기치 아래 한 자리에 모인 한국의 40여개 여성, 청소년, 환경, 소비자, 교육 등 제반 시민단체 및 노동, 농민 등 민중단체들은 생태적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의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약한 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한 지난 10년을 반성·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02년 3월 6일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Korean People's Network on Rio+10)를 결성,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는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 = 만병통치약”, “개발 = 경제발전 = 삶의 질 상승”의 등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있는자를 위해 고통을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국내외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시민사회 및 민중단체 간 다양한 연대를 꾀하고자 하며, 더불어 중앙정부·기업·지방정부들과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10년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입안·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장애인, 빈민, 지역주민, 여성, 어린이/청소년, NGO,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참여를 각 정책입안기관에 촉구하며 이들의 참여가 단지 말뿐이 아닌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길 희망하며 이를 위

해 힘쓰고자 한다. 정부는 우리공동의 환경자산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생태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제반 개발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의 효율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효율'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확실한 생태계보호적·사회적 제한을 국민적 합의로 설정, 우리사회의 경제·문화·환경적 주권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인간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공동체사회, 전쟁과 빈곤이 없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숭고한 노력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모두가 반드시 일구어야 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사회경제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위해 지구상의 청소년, 지역주민, 여성,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시대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천해갈 것이다.

2002년 3월 6일, 리우+10한국민간위원회

WSSD와 한국여성환경위원회의 역할

이상영 위원 / Rio+10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

1. 배경

- 2002년 지구정상회담은 그 준비과정에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UN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주요 이해당사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여성임. 현재 전 세계 여성·환경NGO들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Womens Caucus”를 조직하여 의제21을 성 관점(Gender Perspectives)에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Engendering Agenda 21’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음.
- 또한 이 회의에서는 2002년 지구정상회담에 제출할 여성행동 의제(Women’s Action Agenda 21) 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성과 발전’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10개의 주제를 선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이미 작성되었던 제 4차 세계여성회의(북경) 환경부문 행동강령 및 리우 의제 21 등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과제 및 장애물 등에 대해 전세계 여성환경인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의임. 더욱기 우리나라의 경우 리우+10 회의는 ‘통일시대 대비’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남북의 여성환경인들이 만나 남북통일과 환경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이에 ‘리우+10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는 국내 여성환경인의 연대망 조직, 한국 여성환경활동 평가, 의제점검 및 새로운 의제 발굴,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세계 여성환경인들과 함께 리우+10 회의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을 전개하고자 함.

2. 목적

- 2002년 '리우+10 회의', Womens Caucus(여성지도자 회의) 및 NGO Forum 참가를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여성환경인 네트워크 강화
- 여성환경의제 이행상황의 점검과 새로운 과제 제시
- 통일시대 대비 남북여성의 환경역량 강화

3. 과제

- 국내여성환경인 네트워크 조직
- 아시아 여성환경인 네트워크 조직
- 여성환경의제 이행평가 및 과제에 대한 연구
-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실행 촉구
- 여성민간보고서 작성

4. 준비상황

- 국내
 - 한국여성환경위원회 조직(2002. 9. 13)
 - : 현재 총 19개 여성, 환경관련 단체가 참가하고 있음.
 - 동북아 여성환경회의 개최(2001. 9. 13-15)
 - :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여성환경운동가 및 연구자들이 모여 각 국의 환경운동 사례 발표 및 서울환경선언문 작성, 비무장지대 현장답사
 - 여성환경의제 이행 평가를 위한 연구(2001.10-2002.2)
 - 여성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분과 조직 및 세미나 진행(2002. 3-2002. 4)
 - 성과 거버넌스
 - 발전과 평화
 - 지방의제 21
 - 환경과 건강
 - 생산과 소비
 - 농촌과 여성농민
 - 환경교육과 정보
 - 기타

- 정책간담회(2002. 4. 22)
 - :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여성환경인 역량강화 및 환경정책의 성 관점 통합을 위한 여성환경정책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
- 남북한 여성환경회의 관련
 - :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두만 넷, UNEP에 협조 요청
- 국제
 - CSD Womens Caucus (여성지도자 회의) 아시아 협력단체로 참여
 - WSSD 현지활동과 관련, '동북아여성환경연대'참여단체와 의견교환 중
 - : 일본 기타규슈 여성포럼 참여의사 확인
 - 기타 중국, 홍콩, 몽골 등 의사타진 중

5. 향후 사업계획

1) 워크숍

- 일시 : 2002. 5. 10 ~ 11
- 장소 : 서울 길동 두산 연수원
- 목적
 - WSSD의 의미와 여성'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 여성환경위원회 활동 공유
 - 분과별 네트워크 독려
- 내용
 - WSSD의 주요의제 및 NGO 대응
 - WSSD와 젠더 이슈 (국제여성환경조직의 준비동향)
 - 한국 여성의 과제 점검
 - 주요 주제별 position paper 발표
 - WSSD 현지행사에 대한 정보공유

2) '여성NGO보고서' 작성

- 성 관점에서 '의제21국가발전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 제시
 - 분과활동을 통해 주요 의제별 보고서 작성(6월말)
 - 국·영문 보고서 제작 (7월)

3) 심포지움

- 일시 : 7월 여성주간 중
- 목적 : 일반 여성 및 여성단체에 WSSD의 의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홍보
- 내 용
 - 세미나
 - 여성환경정책 과제 개발
 - 국내외 사례 발표
 - 문화행사

4) WSSD 참가 및 현지활동

- 아시아 (또는 동북아) 여성환경회의 개최
 - 일시: 2002. 8. 28 (미정)
 - 장소: 요하네스버그 NGO 포럼場
 - 내용: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젠더 이슈 공유
아시아여성환경운동 현황 점검 및 공동과제 모색
- 남북여성환경인 회의 진행
 - 국내 대북 접촉관련 협력 요청
 - 실현 가능성 모색 및 프로그램 기획
 - WSSD 현지 교류프로그램 실시
- 행사 참가 및 해외단체와의 미팅 조직
 - Women's Voice Tent 참가
 - 여성NGO와의 공동캠페인 진행
 - 외국단체 및 개인과의 미팅 조직
 - 홍보: 영문 브로셔 및 보고서 배포

5) 평가 및 후속활동

- 참가단 보고대회 개최
- 참가보고서 작성
- NGO 포럼장에서의 다양한 행사참여,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자료집 출판

6. 기대효과

- 국내외 여성환경네트워크의 가시화
- 리우+10회의에서 한국여성들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남북여성환경인의 교류 틀 확보
- 가시적 성과물
 - 여성환경NGO보고서
 - 워크샵, 심포지움 자료집
 - 남북여성환경회의 보고서
 - 최종 보고서

<참고자료 1>

□ 제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환경부문(K)

- 전략목표 -

- K.1. 모든 수준의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그적으로 포함한다.
- K.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 K.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설치한다.

□ [의제21] 의 제 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 목표(요약) -

- a. 자연생태계 관리 및 환경침해통제에 대한 여성의 역할 강화
- b. 환경 및 개발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 c.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부문의 여성참여를 방해하는 법적, 행정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장애 제거 전략 마련
- d. 1995년까지 개발 및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과 영향을 측정하는 기구 설치
- e. 여성의 문해, 교육 및 훈련, 영양과 보건, 의사결정과정과 환경관리에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이행
- f.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근절을 위한 법, 행정, 교육 등 제반 조치 마련과 이행

□ 우리나라 의제 21국가실천계획 제24장 이행계획

- a. 환경과 개발 분야의 여성참여 증대
- b. 정치 및 의사 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증대
- c. 여성발전 기반 구축

- d. 환경과 여성보건
- e. 평화문화정착, 통일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 f. 여성환경활동지원체계 마련

□ 2002 건강한 지구를 위한 여성행동의제(초안)

- a.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
- b. 세계화와 국제기구의 책임
- c. 분쟁과 군사경쟁의 사회환경적 요소: 평화군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
- d. 자유시장주의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의 목표
- e. 국제공공재에 대한 여성의 권리
- f. 여성의 성적, 재생산 건강권과 환경
- g. 환경안전: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
- h. 생물종 다양성 보전, 원주민의 지식과 자원
- i. 지속가능한 도시의 GENDER 적 요소
- j.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에 있어서의 성차

<참고자료 2>

□ 리우+10한국여성환경위원회 조직체계

○ 참가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미래,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불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한국여성민우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대화문화네트워크, 환경정의시민연대 (준)아동환경센터, 생명회의, 대전여성환경포럼,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여성위원회(준), 평화여성회, 여성농민연구소

○ 사업집행구조

- 운영위원장 : 박은경(대한 YWCA 연합회 부회장)
- 운영위원 : 김상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양희(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김영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김재욱(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순홍(대화문화아카데미 주임연구원)
안정선(대전여성환경포럼 상임대표)
유은옥(수원YWCA 회장)
이상영(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정자(녹색연합 공동대표)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실장)
진위향(생명사랑 대표)
한지현(원불교 여성회 회장)

- 실무위원 : 이미영(여성환경연대)
명진숙(여성민우회)
김미자(대한YWCA연합회)
최재숙(환경운동연합)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정지연(원불교 여성회)
김소연(환경정의시민연대)
박연희(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현숙(여성농민연구소)

○ 분과위원회

- ① 성(Gender)과 거버넌스
- ②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 ③ 지방의제21과 여성
- ④ 환경과 건강
- 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⑥ 지속가능한 농촌과 여성농민
- ⑦ 환경교육과 정보
- ⑧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인권

지방정부의 WSSD 참가준비 현황 및 계획

김귀순 교수 / 부산외국어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국제담당 자문위원

1. 전국협의회 준비회의

1) 제7차 운영위원회

- 2001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
- 리오+10회의 준비기구 결성 결의

2) 제8차 운영위원회

- 200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 리오+10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협의

3) 제9차 운영위원회

- 2001년 8월 16일, 제주도 제주시
- 2002년도 사업계획에 WSSD 예산반영 요구

4) 제10차 운영위원회

- 2001년 9월 5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02년 예산에 참가경비 1인당 4,000,000원씩 반영 요청

5) 제3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5일~7일, 전라북도 전주시
- 주제발표 : Rio+10회의와 지방의제21의 발전방향 논의

6) 지방의제21 WSSD 준비위원회 개최

- 2001년 10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 WSSD 참가대책 및 준비방안 논의

7) 제11차 운영위원회

- 2002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
- WSSD 관련 사업을 2002년 사업계획에 반영

2. WSSD 준비회의 참가

1) Prepcom I

- 2001년 5월, 미국 뉴욕
- 국가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염태영 사무처장 참석

2) WSSD 준비 토론회 참석 안내

- 2001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외교안보교육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참석 안내

3) 세계지방정부준비회의의 참가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preparatory Meeting)

- 2002년 2월 26일~3월 1일, 캐나다 밴쿠버
- 참가자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염태영 사무처장, 김귀순 교수
- 세계 지방정부의 WSSD 준비 상황 파악 및 한국 지방의제21 활동 소개
- 한국의 지방정부세션 참가 의사 개진 및 전국협의회 ICLEI 회원 가입 논의

4) 아시아지자체국제환경심포지엄(International Environment Symposium for Asian Local Governments) 참가 및 발표

- 2002년 4월 27일~4월 29일, 일본 요코하마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경기도, 양평군
- 한국의 지방의제21 활동 소개 및 아시아지역 상황 파악
- '지방의제21 아시아·태평양 정보센터(Asia-Pacific Local Agenda 21 Information Center)'(가제) 설치 제안

5) Prepcom IV 참석

- 5월 27일-6월7일 인도네시아 발리
- 참석자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염태영 사무처장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WSSD 참가 승인 문제 및 지방정부 세션 및 시민사회 포럼 참석에 관한 제반 사항 논의 예정

3. WSSD 대비 추진사업

- 1)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홍보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한국의 지방의제21 소개, 우수사례 등을 담은 팜플렛 제작
 - PrepcomⅡ에서 홍보용으로 배포

- 2)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홍보브로셔 제작 및 배포
 - 전국협의회, 지방의제21의 전국현황, 우수사례 등 소개
 - 세계지방정부준비회의(2002년 2월 27일 ~ 3월 1일)에서 배포

- 3)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영문홍보책자 제작 준비
 - 전국협의회 등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조직 및 사업 소개
 - 각 추진기구로부터 원고 취합 : 4월~5월
 - 책자 제작 : 7월 중순

- 4) 지방의제21 우수사례(국문·영문) 제작 예정
 - 지방의제21 추진사례를 공모·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소개
 - 우수사례 평가지표 개발 : 2002년 4월
 - 우수사례 공모 : 2002년 5월~6월
 - 우수사례집 제작 : 2002년 7월

- 5)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 예정
 - 2002년 6월까지
 - 우리나라 지방의제21 현황 소개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링크

- 6) 세계지방정부준비회의 자료 번역 및 소개
 - 전국협의회 소식지(3월8일 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추진기구에 소개

- 7) 한국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단체 및 주요그룹(지방정부)으로 참여
 - 한국민간위 보고서에 지방정부 부문 담당

4. WSSD 지방의제21 참가단 구성 및 운영

1) 참가단 제1차 접수

- 2001년 12월 16일부터
- 공문 및 홈페이지로 홍보

2) 참가단 제1차 모집 결과(2002.4.16까지)

- 참가자 수 : 총 80명
- 참가비 : a. 1인1실 사용자 - 3,500,000원
b. 2인1실 사용자 - 3,000,000원

3) 참가단 제2차 모집 계획

- 추가 신청 접수 :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20명 추가 접수.

5. WSSD 참가단 교육

1) 제 1차 WSSD 참가단 교육

- WSSD 참가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회
- 4월 24일 : 광역지자체
- 5월 17일 : 수도권지역, 5월 24일 : 영·호남지역

2) 제 2차 WSSD 참가단 교육

- 지자체선거 이후 최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WSSD 주요 이슈와 세계 지방정부의 동향에 대한 점검 후 한국 지방의제21의 위상을 정립하고 WSSD에서 해야할 일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일시 : 7월 중순 경

6. 현지 참가 계획

1) 참가행사 일정

- World Summit : 8/26~9/4, 샌톤 컨벤션센터
- 지방정부 세션 : 8/27~8/29, 크라운플라자

- 시민사회 포럼 : 8/23~9/4, 엑스포 센터
- NGO Side Event : 8/20~8/30
- Ubuntu village and Exhibition : 8/26~9/4, Wanderers Stadium
- Korean Day : 8/29

2) 행사 참가 계획

- 지방정부세션 참가 및 발표
 - a.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확정 안됨. 현재 100명의 Pre-registration 만 접수
 - b. 세션에서 가능한 3인 이상 발표할 기회 섭외 예정
- Civil Society Global Forum 참가 및 발표
 - a. 다른 주요그룹과의 교류와 다양한 이슈의 지방의제와의 연계를 위해 지방의제활동의 홍보 및 정보 교류
 - b. 포럼 주제따라 최대한 발표 기회 섭외 예정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세션 개최
 - a. 국가단위에서 지방의제21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간 지방의제21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 b. 현재 지방의제21의 전국단위 조직이 있는 나라들을 섭외 중
- 홍보부스설치 및 운영
 - a. 부스당 US\$450로 5개정도 신청예정
 - b.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및 각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홍보자료 배포 및 비디오 상영 등

7. 기타사항

1) 지방정부 설문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작

- ICLEI에서 Rio회의 이후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한 전세계 설문조사로 한국에서는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협의회에서 주관
-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국문·영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Earth Summit 2002 번역

- Prepcom I 에서 제공된 Earth Summit 2002는 WSSD에 대한 각 영역의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책으로 전국협의회 번역팀을 통해 번역

3) WSSD 자료실 운영

- 전국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WSSD 게시판 마련
- 국내외 WSSD 준비에 관한 자료 게시 및 국문번역자료 비치
- 국내외 WSSD 준비회의 및 국제회의 안내

4) 외국인 자원봉사자 모집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 제작되는 영문서 감수 역할
- 환경운동단체 및 녹색당 경력자로 구성

5) 남아공 사전답사

- 회의장소 · 제반 편의시설 Check 및 관계자 Meeting
- 2002년 5월 6일 ~ 12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산업계의 역할 및 과제

엄기웅 상무이사 / 대한상공회의소

1.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업(산업계)의 역할

- 비록 WSSD에 우리기업이 많이 참가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은 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그들의 의사결정과 기업운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속가능 발전에서 기업들의 역할은 우선 정부 및 다른 이해 당사자들(소비자, 주주 등)로부터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임.
-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임.
-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기업이 정부대신 정책적 합의를 이루거나 공공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여기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음.
- 전세계 경제와 사회의 기능이 변화하듯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기업의 역할도 변화하고 더욱 커질것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핵심적 역할
 - 지속가능발전에 부합되는 상품, 용역, 투자를 통한 부와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자원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환경과 재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데 정부와 다른 스테이크홀더와의 자발적 협력과 이니셔티브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한상의(산업계)의 활동

<중점 추진사업방향(목표)>

-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의 참여촉진
-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정책의 참여
- 국제 온실가스 저감 등에의 능동적 대응

<주요사업내용>

-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 환경·안전 분야 산업계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등 정보교류와 공동 관심사 논의,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산업계 입장정리의 장으로 활용함.
- 환경·안전포럼 운영 (NGO 및 언론과의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홍보하고, NGO 및 언론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
 - NGO, 학계 및 언론과의 간담회 개최, NGO 및 언론과 공개 토론회 개최

**** 예:** 기업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가. 일시/장소 : 5월 2일(목) 08:00, 플라자호텔

나. 참석 : 대한상의 회원업체 임직원 100여명

라. 사회 : 박영숙 위원장(WSSD 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마. 주제 : 기업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준용 LG환경안전연구원 원장)

-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의 필요성 강조 (한국형)

- Dow Jones 모델 등 다양한 평가모델 제시

○ 산업환경·안전·보건 정책 연구 및 건의

- 산업환경·안전·보건 정책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추구함.

○ 산업환경정보시스템 운영(<http://env.korcham.net/>)

- 환경·안전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D/B화)를 목적으로(회원제 운영) 하며, 환경·안전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one-stop으로 접할 수 있는 종합환경정보망으로 운영하여, 업계의 환경친화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

○ 환경·안전·보건 경영 교육과정 운영

- 업계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촉진(최신동향 및 실천기법 보급 및 종사자 전문성 향상), 녹색소비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구매 확산(소비자의 의식개혁 주도) 등을 목적으로 함.
- 국제환경협약, 환경경영전략, 청정생산, 그린마케팅, 환경회계, ISO 14000 시리즈 (환경경영체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전과정평가 등)

○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도진단사업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경영 추진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지도,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획함으로써 단기간에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청정생산 촉진 사업

- 국내·외 고부가가치의 청정기술개발, 공정혁신, 그리고 이전확산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청정기술개발사업, 공정혁신사업, 이전·확산사업, 진단지도, 교육·훈련, 시범사업, D/B 구축, 표준화, 우수사례발굴 등과 관련된 사업
- 기업의 녹색구매(green purchasing) 활성화
 - 산업계는 원료 구매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부가 추진중인 환경성적표지제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됨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환경시장(green market) 및 그린소비자(green consumer)의 요구에 부응하고,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정부는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접근을 중시해야함.
- 또한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정부가 만들고 이를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모든 부문의 일치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국측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Eco-Funding,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킬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 개발, 친환경적 산업구조 개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부록 : 파트너십/이니셔티브 관련 자료

1. 비공식 회의 부의장 요약문

2. 추가 지침

3. Type 2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소 : 122-706,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http://www.pcsd.go.kr>

<http://wssd.pcsd.go.kr>

Tel : 02-385-7600